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1. 12. 15 | 통권 제11호(2011-11) |

비정규직 고용 및 임금 동향

[요약]

-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1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증가는 정규직 고용규모 증가가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규모 증가에 더 크게 힘입은 것으로 추측됨.
-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2009~2010년에 비해 활발한 것은 아니나 이직 또는 해고 감소로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한 것이 비정규직 고용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정규직-비정규직 간 상대임금 격차도 감소했는데, 이 역시 2009년의 경제충격에서 벗어나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에 급격히 상대임금 격차가 증가한 것도 경제충격에 따른 고용반응의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비정규직 임금차별 증가로 해석될 여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임.

비정규직의 규모 동향

- 비정규직 규모는 2011년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09천 명 증가한 5,994천 명을 기록함.
 - 비중으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34.2%로 전년 동월대비 0.8%p 증가한 것임.
- 정규직은 같은 시기 11,362천 명에서 11,515천 명으로 153천 명 늘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6.7%에서 65.8%로 0.9%p 하락함.
-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은 309천 명, 정규직은 15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임금근로자 증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추측됨.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서도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은 273천 명, 정규직은 175천 명이 증가해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바 있음.
-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는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증가할 수도 있고, 해고나 이직이 줄어들면서 비정규직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감소해도 증가할 수 있음.
- 만약 비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 해고나 이직이 줄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감소한다면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
-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2011년 8월 비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된 사람의 수는 2009년 이후 2년 연속 전년동월보다 줄어들었지만,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신규채용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 없어 근속기간 2개월 미만인 자가 새로 채용된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와 같이 2011년 들어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한 원인은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이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나 이직이 줄어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 비정규직 세부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에서 지난 몇 년간 발생했던 큰 변화로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자 급감, 1년 계약자 급증을 지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현상이 모두 2011년 8월 현재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2002. 8	14,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5.8)
2003. 8	14,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4)
2005. 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주 :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포함되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포함되므로, 전체 비정규직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전체 비정규직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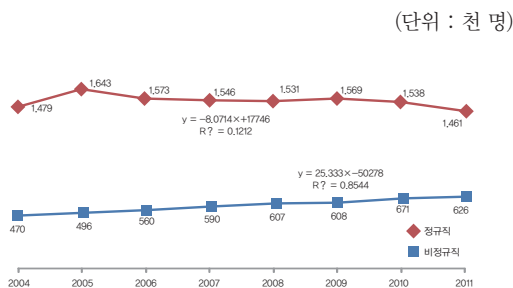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3 좌측 참조).

- 비전형 근로에서는 파견, 용역, 일일근로가 꾸준히 증가하고 가정 내 근로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에는 파견근로가 소폭 감소함.
- 시간제 근로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2011년 8월에도 증가했음(표 1 참조).

비정규직의 임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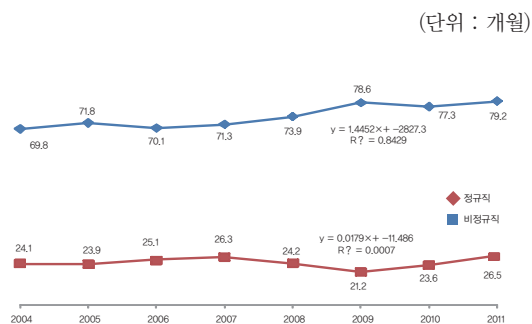
-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비정규직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하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인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전년동월보다 상승함(그림 4 참조).
-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2007년 63.5에서 2009년 54.6으로 급락했는데, 이는 정규직 실질임금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비정규직 실질임금은 급락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음.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 신규 입직자 수 (고용된 지 2개월 미만인 사람의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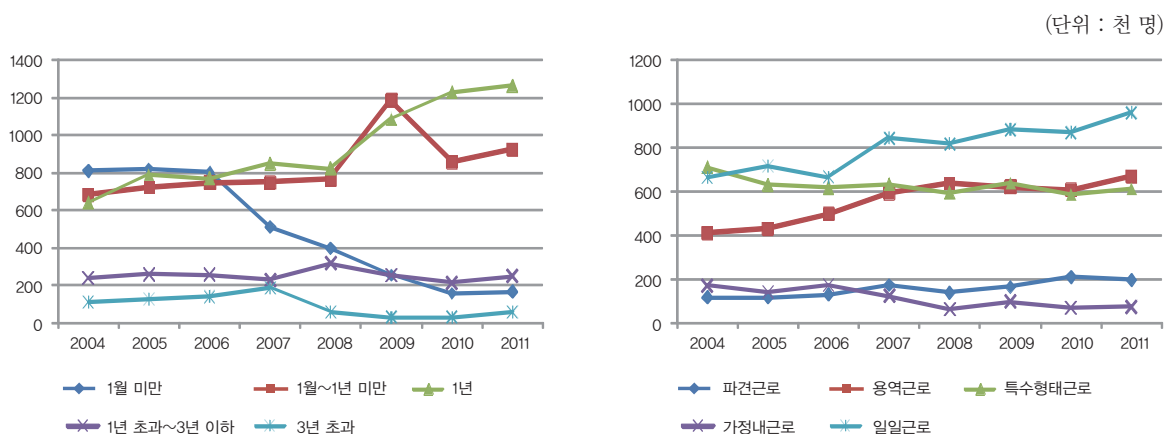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2〉 정규직·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3〉 기간제 계약기간 및 비전형 근로 세부형태별 근로자 수 추이



주 : 좌측은 기간제, 우측은 비전형 근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 2011년 비정규직 실질임금은 아직 2007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상대임금 또한 2009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비정규직 상대임금 변화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강화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경기침체에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얻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하락해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임금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임금서열의

하위에 있는 비정규직 임금이 저하되어 나타날 수도 있음.

-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임금구조 자체의 변화로 인한 비정규직 상대임금 변화를 '가격 효과'로 지칭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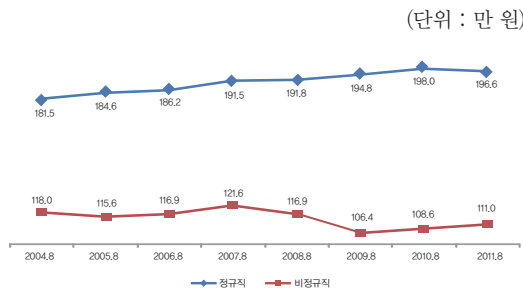
- 이 외에도 비정규직 내부 구성의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음.

- 이를테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비정규직부터 우선적으로 고용조정이 될 수 있음.

- 또한 추가 취업에 나서야 하는 가구가 많아질 수 있고,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이런 현상이 활발해질 수 있는데, 이들은 결국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비정규직 내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져 비정규직 상대임금이 하락할 수 있음.

- 실제로 2007년 8월과 비교할 때 2009년 8월의 경우 전문가나 사무직종에서는 비정규직 수가 줄었지만, 단순노무직종에서는 비정규직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자는 고용조정 영향, 후자는 추가취업 노력의 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림 4> 정규직·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추이(2005=100)



주: 부가조사 설문에서 월임금은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으로 조사되므로 6~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평균해서 실질임금 계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2> 근로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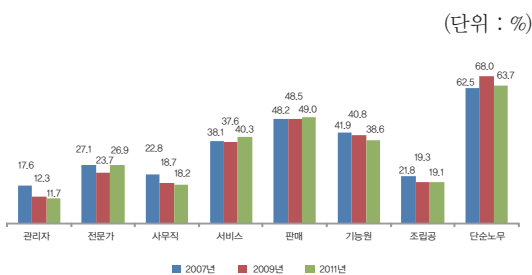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상대임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월평균 임금(만원)	177.1	184.6	190.8	200.8	212.7	220.1	229.4	238.8
비정규직	상대임금	65.0	62.7	62.8	63.5	60.9	54.6	54.8	56.4
	월평균 임금(만원)	115.2	115.6	119.8	127.6	129.6	120.2	125.8	134.8
한시적 근로		69.5	67.2	68.8	71.7	68.5	59.1	61.0	62.9
기간제		67.0	68.2	67.7	70.6	70.0	59.6	59.3	61.3
반복갱신		96.2	91.7	93.0	97.0	87.1	87.7	98.6	92.2
기대불가		51.9	50.1	49.8	47.0	49.5	47.2	46.2	50.1
비전형 근로		60.3	58.5	54.8	55.4	56.3	54.1	54.4	55.3
파견		71.8	71.3	66.1	66.8	69.3	64.3	61.5	63.8
용역		52.1	51.4	48.9	51.0	50.9	50.5	51.2	51.3
특수형태근로		78.5	77.1	69.3	70.8	73.0	69.5	71.0	75.0
가정 내 근로		31.8	30.7	31.3	28.3	22.9	27.3	19.0	21.8
일일근로		47.2	46.6	45.7	44.4	46.2	43.3	45.3	44.2
시간제 근로		30.4	28.3	28.9	27.9	27.0	24.3	24.6	25.3

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임. 금액은 명목월임금이며,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상대임금을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 이하에서는 비정규직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상대임금 변화를 ‘분포효과’로 지칭할 것임.
- 비정규직 상대임금 변화가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등 임금구조가 변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특성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해 Juhn, Murphy & Pierce¹⁾가 개발한 임금격차 요인별 분해방법을 이용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들인 연령, 근속기간, 여성 비중, 학력, 산업, 직종의 분포 및 임금 변화가 비정규직 상대임금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시간당 임금격차를 대상으로 분석함.
- 2008년에는 내수침체로 인해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므로 그 이전인 2007년 8월과 2009년 8월, 그리고 2011년 8월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함.
- 2007년 8월 36.44%였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임금 격차는 2009년 8월 47.75%로 11.31%p만큼 증가했는데,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시기에 걸쳐 나타난 평균 근속기간의 분포변화 효과가 이 중 3.36%p를 설명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3 참조).

- <그림 2>에서 본 것처럼 2007년에 비해 2009년은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조정과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얻으려는 구직행렬 증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로 인해 평균 근속기간이 감소해 그 격차가 증가했음.
- 2007년 8월과 2009년 8월 사이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같이 평균 임금이 높은 직종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같이 평균 임금이 낮은 직종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직종 분포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요인이 상대임금 격차 증가의 2.57%p만큼을 설명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표 3 및 그림 5 참조).
- 또한 <그림 6>을 보면 이 시기에는 저학력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데, 이와 같이 각 학력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비중의 변동도 1.97%p만큼을 설명해 어느 정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림 7>을 보면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퇴장 연령대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주력 연령대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드는 등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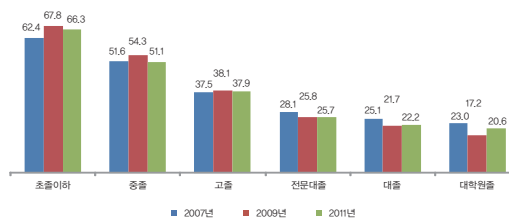
〈그림 5〉 직종별로 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연도별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6〉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1)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은 「노동리뷰」 2011년 12월호(한국노동연구원 발간)에 실린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Ⅲ)」를 참조.

령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또한 1.81%p를 설명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0.66%p).

■ <표 3>에서 2007년과 2009년 임금격차 변화 분해에 따른 가격변화 효과를 보면 임금차별 또는 불평등 증가로 인한 비정규직 임금 저하 같은 임금구조 자체의 변화가 상대임금 격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데, 관찰된 요인의 총가격효과는 -2.46%p로 나타나 오히려 상대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표 3>에 보면 '미관찰요인 변화에 따른 격차 변화 효과' 항목이 있는데, 이것으로 설명되는 상대임금 격차 증가분은 2.38%p, 즉 전체 차이 11.31%p의 약 5분의 1로 그리 중요한 설명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미관찰요인'이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는 요인이라는 의미임.

- 예를 들어 소위 '스펙'은 데이터상에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없어 미관찰요소가 되는데, 스펙이 높은 사람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변했고, 스펙이 낮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정규직 임금을 10등분할 경우 대략 하위 4분위쯤 되던 비정규직 평균 임금 수준이 하위 3분위로 떨어질 수 있을 것임. 이것이 바로 미관찰요인인 스펙의 분포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임.

-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증가는 미관찰요인 중 분포변화의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또는 과거보다 기업에서 스펙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비정규직이어서가 아니라 스펙에 대한 가격이 변화된 결과로 인해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떨어질 것임. 이것이 바로 미관찰요인인 스펙의 가격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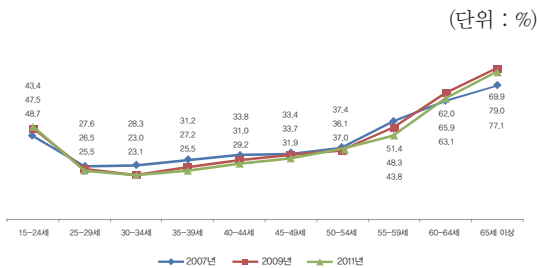
<표 3> 연도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결과

	2007년(A)과 2011년(B) 임금격차 변화 분해			2007년(A)과 2009년(B) 임금격차 변화 분해			2009년(A)과 2011년(B) 임금격차 변화 분해		
	총격차	분포변화 효과	가격변화 효과	총격차	분포변화 효과	가격변화 효과	총격차	분포변화 효과	가격변화 효과
A년도	36.44%			36.44%			47.75%		
B년도	44.24%			47.75%			44.24%		
격차 변화(B-A)	7.80%p			11.31%p			-3.52%p		
관찰요인 변화에 따른 격차 변화	6.60%p	8.95%p	-2.34%p	8.93%p	11.40%p	-2.46%p	-2.33%p	-2.17%p	-0.16%p
연령		2.25%p	-0.27%p		1.81%p	-1.28%p		0.39%p	1.05%p
근속 기간		2.10%p	-1.71%p		3.36%p	-0.96%p		-1.18%p	-0.83%p
여성 비중		1.40%p	-0.25%p		1.61%p	-0.37%p		-0.20%p	0.11%p
학력		1.24%p	-0.29%p		1.97%p	0.27%p		-0.72%p	-0.56%p
산업		0.66%p	0.35%p		0.08%p	0.41%p		0.81%p	-0.29%p
직종		1.30%p	-0.18%p		2.57%p	-0.53%p		-1.27%p	0.35%p
미관찰요인 변화에 따른 격차 변화	1.19%p	1.17%p	0.03%p	2.38%p	2.51%p	-0.12%p	-1.19%p	-1.29%p	0.10%p

주: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함. 실질시간당 임금을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이용했으며, 연령은 연령 및 연령 제곱, 근속은 근속 개월 그대로, 여성 비중은 여성 더미, 학력은 초졸을 기준으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더미, 산업은 산업대분류(제조업 기준), 직종은 직종대분류(단순노무자 기준)로 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음. 회귀식 추정결과 보고는 원고 분량상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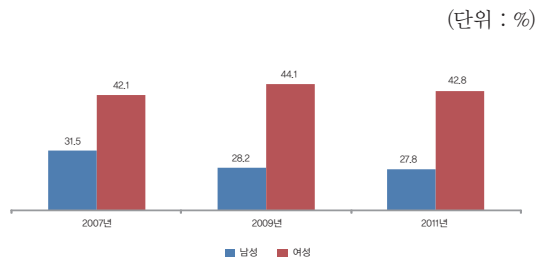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7〉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주: 그림의 값은 맨 위가 2007년, 가운데가 2009년, 아래가 2011년 비정규직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8〉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 이상과 같이 볼 때 2007년 8월과 2009년 8월 사이 나타난 비정규직 상대임금 격차 증가현상의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해 비정규직 구성이 변화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표 3〉에서 경기회복기인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상대임금 격차가 3.52%p 줄었는데, 이 시기에도 미관찰요인(1.19%p)보다 관찰된 요인에서의 변화(2.33%p)가 중요하며, 관찰된 요인의 분포변화 효과(2.17%p)가 가격변화 효과(0.16%p)를 압도했음.
- 평균 임금이 비교적 높은 전문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단순노무직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 직종에서의 변화(-1.27%p)와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하면서 2009년에 비해 근속기간 격차가 감소한 것(-1.18%p)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과 연령에 따른 비정규직 분포변화는 여전히 상대임금 격차를 다소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음.

- 2011년이 되어도 여전히 2007년보다 상대임금 격차가 7.80%p 더 큰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2007~2011년을 비교해보면, 역시 미관찰요인(1.19%p)보다 관찰된 요인(6.60%p)이 중요하며, 관찰된 요인 중 분포변화 효과(8.95%p)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관찰된 변수들의 가격효과는 상대임금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2.34%p)했음.
- 분포효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연령에 따른 비정규직 분포변화, 근속기간 격차, 비정규직에서 여성 비중 증가, 직종 변화, 학력 순으로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은 여전히 2009년과 유사하며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증가하긴 했지만 정규직은 더 많이 증가해 2009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등 2009년 변화의 영향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²⁾

2) 비정규직 중 기간제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예외가 있고, 비기간제의 경우 상관없는 조항이긴 하지만, 2년을 초과해 장기간 노동력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쓰지 말고 정규직을 뽑아서 쓰라는 취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안정되더라도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처럼 꾸준히 증가하진 않을 것이므로, 2007년과 비교해 2011년 나타난 평균 근속분포 차이에 따른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이는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앞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대임금 격차는 감소하긴 하겠지만, 2007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는 것이지 비정규직 임금차별 감소 같은 변화가 생긴다면 더 감소할 수 있음.

- 이 상에서 비정규직 규모변화와 상대임금 동향을 분석해 보았음.
 -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해고, 이직 등이 줄어 전년대비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함.
 -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용조정, 추가소득 확보를 위한 구직행렬 등이 발생해 비정규직 구성 변화가 나타나

- 면서 상대임금 격차가 증가했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2011년 상대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07년 이후 상대임금 격차 변화에서 비정규직 임금차별이나 불평등 증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eongjm@kli.re.kr / 02-3775-5580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